



“출연연의 비전 · 임무 · 예산 ... 바뀌어야 제몫 할 수 있다”

글_서현교 사이언스타임즈 기자
shkshk@hanmail.net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동안 “투자에 비해 연구효율이 저조하다”, “이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중복 연구를 피해야 한다” 등을 지적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채영복, 이하 과총)가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모았다.

과총 부설 정책연구소(소장 이달환)는 지난 9일 과총 국제회의장 중강당에서 ‘정부출연(연)의 연구효율성 극대화’란 주제로 제1회 월례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출연연의 비전과 임무(분과1) △출연연

연구생산성(분과2) △2006년 출연연 예산배분(분과3)으로 각각 나눠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출연연의 시스템과 역할 변화를 촉구했다.

출연연 ‘연구도사’, 연구신바람 실종돼

〈분과1〉주제발표에서 ‘출연연의 비전과 임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연구책임자들이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정부부처에서 연구비를 따기 위해 정력을 낭비해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구도사’들이 인건비 조달을 위해 다른 기관과 외



주 프로젝트 따오기를 경쟁하면서 안정적 연구 분위기가 저하되고 연구 신바람은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정책과 출연연 경영간의 절묘한 조화와 유기적 연계를 확보해 출연연이 국민소득 2만 달

리 달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과학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출연연이 이제 40년 역사를 갖게 됐고 대덕연구개발특별법,

R&D지원 확대 등 유리한 상황에 있다”면서 “출연연이 이제 새로운 비전과 임무를 갖기 위해서는 민간연구소가 왜 잘 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협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원장은 출연연을 관할하는 각 연구회를 중심으로 산하 출연연을 재조직해 연구회가 유연한 체제로 출연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연구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김 원장은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는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수행에, 산업기술연구회는 산업화에 초점을 두고 기업과 협력이 가능한 응용기술 연구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민간연구소에 수십년간 근무하다가 출연연 연구원 원장을 맡아보니 정작 전체예산의 20~30%만 관할할 수 있고, 나머지 예산은 연구책임자들이

〈발표요지〉①



「출연(연)의 비전과 임무」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업을 전제로 연구를 하는 ‘창업형’이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상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형’이다. 우리 나라 출연연은 어떤 색깔인지 불분명하다.

출연연은 비전과 임무가 확실해야 한다. 대만의 출연연인 ‘이트리’는 5년 후 창

또한 우리 출연연이 정부 R&D예산의 42%를 쓰고 있고 박사 인력의 8%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연구생산성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70%에 달하는 정부 수탁과제 비중을 줄여 자체 연구비 비중을 높여 연구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선 각 기관별로 국가적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한 2~3개 상징적 전략과제에 집중

시켜야 하고 출연연 연구활동의 유기적 연계와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세계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우수인력 확보도 급선무다. 우선 연구인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명감을 주문하기보다 지적탐구심 및 열정발휘를 고양시켜야 한다.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제1회 월례열린포럼



종합토론시 객석모습

앵벌이를 해서 스스로 연구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면서 "출연연 자체의 기본예산을 높여 연구원장이 책임지고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인석 과기부 기술혁신국장은 "기관이 이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체제로 나가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해당 기관의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과학

기술 혁신분부는 기술혁신평가국, 예산조정관실, 정책국이 협력해 평가-예산책정-정책마련을 유기적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정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잘 활용해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대변했다.

연구회, 연구목표 따라 조직유연성 확보해야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이란 주제로 <제2분과> 주제발표를 맡은 김충섭 한국화학연구원장은 "화학연구원의 경우 190억 원 규모의 1년 예산이 78개 연구 프로젝트에 분산돼 결국 2억원 이하의 연구 프로젝트들이 난립하고, 한 사람이 5~6개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면서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처럼 연구회가 인사·예산·연구 기획을 갖고 산하기관의 연구기능을 총체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법안 체제를

<발표요지2>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김충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출연연은 △연구소간 역할과 기능의 불명확성 △미래 기술 및 다학제간 융합기술

연구를 위한 조직의 유연성 부족 △외부 수탁사업 중심의 연구체제 △연구과제의 분명한 목표와 성과의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융합기술 연구와 관련해 나노기술을 예로 들면 지금은 연구소나 나노기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속 연구기관의

법인을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체하고 NT, BT같은 미래기술 개발에 맞게 연구회별로 연구센터, 특수목적의 연구그룹 등 전문연구단위로 기존 연구소를 재편하는 조직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현재 3개 이사회 산하 연구기관을 연구회 기능과 역할별로 소속

기관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연구수행주체에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지원하면 연구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야 한다. 이는 과거 생산자 위주의 제조업체체가 이제 소비자 위주의 상품체제로 전환해야 성공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종합토론에 나선 박원훈 전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구소의 변화에 대해서도 “현재처럼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연구소를 학과목 이룸형태로 분류하지 말고 나노기술

등 전문 연구단위로 재편해 연구범주를 기준으로 연합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토론자 발표에서 양지원 KAIST교수는 “연구생산성을 높이려면 정부 부처별로 연구예산을 모으지 말고 기관 고유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대신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로 정부가 예산집행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출연연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원의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절실하다”면서 “가령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자에게 최고연봉으로 대우해 주고, 대신 경쟁력 없는 연구자들은 대학이나 민간연구소처럼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장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정책을 요구했다.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이 정부의 수탁연구를 행할 때 출연연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정

부와 출연연의 임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정부부처 사무관이나 주사가 출연연에 수탁한 프로젝트를 연구 수행까지 일일이 지도해 제대로 연구성과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자 중 지금까지 700여 명이 연구대학 교수로 이직했다”는 사실도 소개하면서 “앞으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관리와 수행 책임을 지고, 자금지원과 평가는 정부가 맡는 명확한 구조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출연연 예산배분시스템 개혁해야

〈분과3〉에서 ‘2006 정부의 출연연 예산방향’을 소개한 유성수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은 “정부 R&D 예산이 올해 1조 7천억에서 내년에 2조 원 정도로 증액될 것이지만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만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

〈발표요지〉③



우선 작년 출연연의 R&D 예산은 1조3,635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1조8천719억 원

「2006년 출연연 예산배분 방향」 유성수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

으로 증액됐다. 그리고 내년의 출연연 예산배분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제고해 지원하는 것과 둘째 안정적 연구비(기본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란 점. 셋째가 정부 국책사업과 연

계된 시설사업은 우선지원 한다는 것이다.

기본사업비 확대는 정부 수탁 연구비 감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각 출연연 고유의 임무와 밀접한 일반사업을 기관고유사업비로 재분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경상비, 기관

고유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 출연연이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기관의 연구여건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기관 고유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육·연구기관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것이다.



유진 KAIST 교수의 질문과 종합토론 모습

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연연과 관련해 우선은 연구회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교류 활성화를 이끌고 기관 고유의 연구기능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R&D예산배분은 정부 산하부처가 총액을 자유롭게 편성하는 탑-다운 제도를 정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최길영 한국화학연구원 선임 연구부장은 “연구 프로젝트가 2억 원 수준이고 절반 이상이 정부수탁과제이다 보니 원전성과 기술성이 높은 성과를 창출 하도록 연구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부의 R&D예산배분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최 연구부장은 이어 “어차피 출연연을 지원할 예산이라면 여러 단계를 거쳐 소 규모로 주지 말고 핵심적·책임적 과제로 구분해 크게 예산을 분배한 뒤 성공여부를 책임지도록 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학과 기업, 출연연이 프로젝트 수주에 경쟁관계에 놓여 이런 관계 때문에 산학연 협력이 외형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연구주체별 국가 프로젝트가 구분되도록 사업을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연연, 국립기관으로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해야

한편 각 분과토의를 결산하는 <종합토론>에서 박원훈 전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정부-각 부처-연구회라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출연연이 연구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면 정부의 예산 선심성 자세도 줄어들고 연구예산의 중간낭비도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목적과 임무는 정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유현 과총 사무총장은 “출연연을 재단법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국립연구기관이므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연구기관”이라고 못 박으면서 “따라서 연구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 연구기관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기능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사무총장은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출연연 고유의 기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복연구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이 연구소들이 국가를 대신해 공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임무에 맞게 예산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포럼에 참석한 한 과학자는 “출연연의 비전과 예산은 정부가 주어야 하는데도 각각의 출연연이 직접 연구거리를 찾아 해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꼬집기도 했다.

유진 KAIST 교수는 “우수한 연구자를 키워내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인력관리 잘못으로 그 분야를 떠나게 하는 데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면서 “결국 연구자 사기를 떨어뜨려 다른 곳으로 밀어내면 국가적으로 큰 소실이므로 정부의 연구자금 지원 정책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선별해 보다 강력한 선택과 집중의 자세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영복 과총 회장은 “매월 한 차례 정부, 학계 및 관련전문가들이 모여 과학기술 현안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이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과총의 노력이 국가 과학기술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㉔